

식량안보, 친환경농업 그리고 농약과 비료



**‘식량안보’ 지구촌 인류 모두의 삶의 목표·수단
배타적 흑백논리보다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인류가 직면한 2000년대의 기본과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다. 그동안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으로 여겨왔던 효율중심의 경제운용은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풀기 힘든 과제를 던져주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도되어온 지구촌의 경영이 실로 진정한 경제적효율이 아닌 경제성장 일변도의 경영이었다.

그 결과 성장의 이면에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 생태계의 파괴라는 무서운 암을 키워 놓았다. 이미 자각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만물의 영장으로 자처하는 인간의 능력은 이 고질적인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을런지...

‘식량안전보장’ 지속적 삶 가능케 한 핵심조건

인간이 직면한 이같은 성장과 환경문제를 농업과 관련하여 축약해 본다면 식량안전보장과 환경농업의 문제로 구체화해 볼 수 있다. 식량안보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선진국민, 후진국민 가릴 것 없이 지구촌 인류 모두의 삶의 기본목표이자 수단이며, 환경농업은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농업부분에 부가된 환경문제 해결의 한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다.

「식량안보」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종합해보면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필요로 하는 식량수요량을 양적·질적으로 용이하게 충족시킬수 있는 식량공급수준」

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의하게 된다면 식량안정보장이 모든 인간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 중에서도 핵심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환경농업은 농촌 및 농업지역의 수질과 토양 그리고 대기의 질을 보존하여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기여하려는 농업의 새로운 대안이다.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 가능하게 생산해 내려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비료와 농약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가? 최근 환경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비료와 농약은 갑자기 농업공해의 주범으로 자리매김이 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인식은 정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흑·백 논리적 산물이다. 특정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사실과 가치관 내지는 가치판단기준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관계를 유도할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동태적 과정과 더불어 앞으로 전개될 동태적 진로, 그리고 흑·백 논리적 평가가 아닌 다양한 가치평가기준이 동시에 고려되지 않고는 특정사안에 대한 올바른 가치평가는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새로운 목표 및 수단의 설계까지도 왜곡시켜 놓게 된다. 이 글의 제목으로 제시된 「식량안보, 환경농업, 농약과 비료」의 관계를 단순히 배타적 흑·백의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이들 관계를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시켜갈 수 있는 사고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즉 인류생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한 이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농약 및 비료가 기여한 역할론면에서 보다 진솔하게 과거와 현재의 것은 사실로서 명백하게 밝히고, 미래의 역할을 추정하여

야 한다. 이것을 기초자료로 인류 또는 국민의 신념과 가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그들의 관계를 정립하고 각각의 역할과 공·과를 평가해야 한다.



김 중 실
경북대학교 교수

위대한 편익뒤에 수반되는 '위험' 인류가 책임져야

인류사회가 발전한 정도나 국가정책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가는 소중한 기준이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의 중요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원시사회에서부터 작금의 21C 정보화시대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변함없이 인류가 추구해온 가장 중요한 목표를 하나만 선택하게 한다면 선진국민, 후진국민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두가 공통된 기본목표로 식량안보를 들게 될 것이다.

실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맬더스의 인구론에 이르러 인구수의 증가와 인간의 식량생산 능력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지적되면서부터이다. 아마 그때부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의 기본 정책과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인류의 식량생산능력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로부터 2백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다수확 품종과 비료 및 농약 개발의 덕분이란 것을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편익을 낳는 결과의 뒤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이나마이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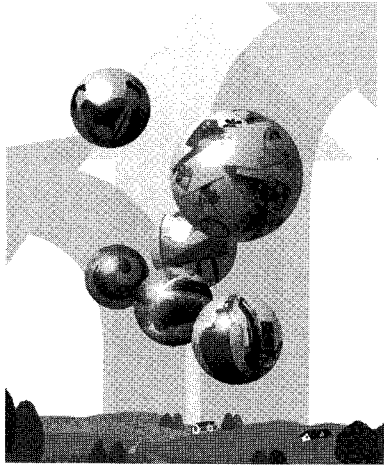
생각해 봅시다

핵기술의 개발이 가져다준 결과들이 그러하듯이 식량 생산의 양적인 성장에도 이제 전 인류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 위험이 단순히 도사리고 있다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표현이 될 만큼 그 부작용의 수준은 이미 우리 삶과 그 환경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

가시적으로 인식되는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은 단순한 동식물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번식능력을 제약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환경호르몬이란 이름으로 인체에 침투된 공해요소가 인체의 각종 질병과 더불어 남성의 정자 숫자까지 급감시켜 놓았다는 각종 보도는 인류모두에게 내려진 적색경보가 아닐 수 없다. 인간에게 준 생태계를 다스릴 권리를 인간들 특히 선진국민들이 너무 남용한 결과이다. 그것이 식량 생산 측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지구촌이 걸린 암 '식량안보·친환경 농업·농약' 상호의존으로 처방해야

그 대응 방안으로 때늦은 감이 있지만 각국에서 환경보호운동이 생산과 소비측면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환경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국제사회의 구속력을 갖는 장치로서 각종 국제 환경협약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국제환경협약중 최근 1990년대의 주요협약으로는 「리우 선언」과 그 구체적 실천을 위한 '의제 21'을 들 수 있다.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가 향후 지구환경질서를 위한 기본원칙을 리우선언을 통해 채택하고, '의제 21'에서 환경문제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대기, 해양, 폐기물, 토양 등의 환경대책, 그리고 국가간의 기술 이전과 제도에 관한 광범위한 지구환경보전 내용들을 규정하였다. 그 후 보다 구체적인 환경협약으로 등장한 것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이다. 이 협약의 채택은 리우선언과 거의 같은 시기에 있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됨으로 인해 본 협약의 발효는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1994년 3월에야 가능했다.

특히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JWP)에서 주도하는 농업환경지표들 중의 농약사용지표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람의 건강보호, 생물다양성 유지, 오존층 파괴농약의 사용제한, 농업생산력 유지를 위한 농약사용 최적화 등이다. 이러한 국제환경협약을 국제무역과 연계시켜서 보다 강력한 국제적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것이 환경보전과 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서 21C 초의 인류가 보여주는 환경보전전략의 결정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연 창조주로부터 지구촌 생태계 관리권을 위임받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 이러한 처방이 지구촌에서 이미 깊숙히 뿌리를 내려 자라고 있는 환경오염이란 이름의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그 처방전 속에는 식량안보-환경농업-비료 및 농약간의 발전적 관계 정립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농약정보**